

“아프면 쉬어요”...오늘부터 ‘상병수당’ 도입

순천 등 6곳서 시범사업 시작

3개 모형...하루 4만3,960원

직장인·자영업자 등 대부분 가능

‘아프면 쉬는’ 문화 정착을 위한 상병수당 제도의 시범사업이 4일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아픈 근로자들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순천시 등 6개 지역에서 상병수당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워져 일을 쉬게 됐을 때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우리나라와 미국(일부 주에서는 도입)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직원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필요성이 부각됐고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본격적 논의가 시작됐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병 상황에서 확진자의 휴무를 독려할 수 있어 직장에서의 집단감염 차단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이번 1단계 시범사업은 4일부터 1년간 6개 지역에서 시행된다. 각기 다른 3개 모형을 적용해 모형별 정책효과를 비교·분석한다.

부천과 포항은 입원 여부와 관계없이 질병·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7일, 최대보장 기간은 90일이다.

종로와 천안 역시 근로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을 지급하되 대기기간은 14일, 최대보장 기간은 120일로 적용한다.

순천과 창원도 근로자가 입원하는 경우에만

의료이용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대기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다.

지원대상은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취업자다.

임금근로자 외에도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돼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임금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지정한 ‘협력사업장’ (6월 30일 기준 105개) 근로자의 경우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지와 무관하게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

여·육아휴직급여,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급,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은 제한이 없다. 그러나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올해 상병수당은 최저임금의 60%인 4만 3,960원이다.

‘근로활동 불가 기간’을 지급 기준으로 삼는 부천·포항(모형 1), 종로·천안(모형 2)에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2개, 종합병원 13개를 포함한 총 223개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이들 의료기관으로부터 1만5,000원의 비용을 내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발급 비용은 신청인이 수급대상으로 확정되면 환급된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보복 수사 대책과 전당대회 준비 등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상호 “4일 의장 선출...다른 상임위 합의”

더불어민주당 이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원 구성 협상 문제와 관련해 “내일은 국회의장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인터뷰

에서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가 또 불발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의석이 17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언제 선거해도 의장은 민주당이 추천한 분이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우 위원장은 “다른 상임위는 합의해야 한다”며 “의장을 뽑는다고 해서 모든 회의를 일사천리로 진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 몫인 의장을 선출해 국회 공전 상태를 멈추고,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속 원 구성까지 일방 처리하지는 않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재명 vs 97그룹’ 민주 당권경쟁 개막

친문 향방·단일화 등 변수 주목

잇따른 선거 패배로 위기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구도가 ‘이재명 대 97그룹’으로 정리되는 양상이다.

당내서 이어지던 ‘이재명 불출마론’에도 이제까지 침묵을 지켜오던 친명(친이재명)계가 최근 집단행동에 나서며 사실상 이 고문의 출마는 기정사실이 된 분위기다.

여기에 친문(친문재인)계 대항마로 평가받던 전해철·홍영표 의원이 불출마하며 비워둔 자리를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생)이

채우면서 당권 대진표가 빠르게 완성돼 가고 있다.

친명계의 핵심 논리는 현재 당의 구심점 역할을 할 역량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며 이 고문이야말로 여기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이 고문 외에 당을 이끌만한 정치적 무게감을 가진 인사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대안부재론’ 역시 이 고문 측의 출마 근거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맞서 97그룹은 ‘이재명 책임론’을 중심으로 이 고문의 당대표 불가론을 내세우는 한편, 세대교체를 앞세워 ‘이대명’을 막겠다고 나섰다.

이 고문이 당 대표에 오르면 ‘친문 대 비문’ 대결로 흥여를 앞섰던 당이 다시 한번 친명과 비명(비이재명)으로 갈려 고질적인 계파 갈등에 시달릴 것이라는 점도 이들이 내건 출마 명분 중 하나다.

물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희비가 극명하게 갈리는 만큼 친명계와 97그룹을 비롯한 비명계는 팽팽한 살바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주목해야 할 또 다른 변수는 97그룹 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이다. 이 고문을 막고 세대교체를 이루자는 취지 아래 ‘반명(반이재명)’ 깃발 아래 결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

유류세 인하·직장인 밥값 지원법 공감대

여야, 고물가 대책 입법경쟁

7월 국회서 법안 처리 전망

여야가 고물가 상황과 관련, 직장인 점심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근로자의 비과세 식대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해당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연석 의원은 지난달 중순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 중 월 10만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한 현행법은 2003년에 개정된 이후 19년간 그대로여서, 간의 물가 변동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근로자의 월 급여에 포함되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송 의원은 “월 급여에 포함되는 식대와 보육수당은 복지 차원에서 근로자들에게 꼭 필요한 수당이나 비과세 한도는 19년간 제자리에 머물면서 현실과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근로자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도 전날 “(직장인 급여 가운데) 비과세 식대 한도를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이를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밥값 지원법’을 다음주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가산디지털단지외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현장 방문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간담회 후 구내식당에서 직장인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높아진 외식물가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오늘 김승겸 합참의장 임명

교육 박순애·복지 김승희 ‘고심’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사진)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따른 안보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군령권을 행사하는 합참의장 자리를 계속 비워두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새 정부 들어 청문회없이 임명되는 것은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두번째다.

전임 원인철 의장은 4일 물러난다.

3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하기로 했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김 후보자를 신속히 임명해야 할 상황”이라며 “별다른 결격 사유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지난달 29일 이미 만료됐다.

윤 대통령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조금 더 고심하는 분위기다. /연합뉴스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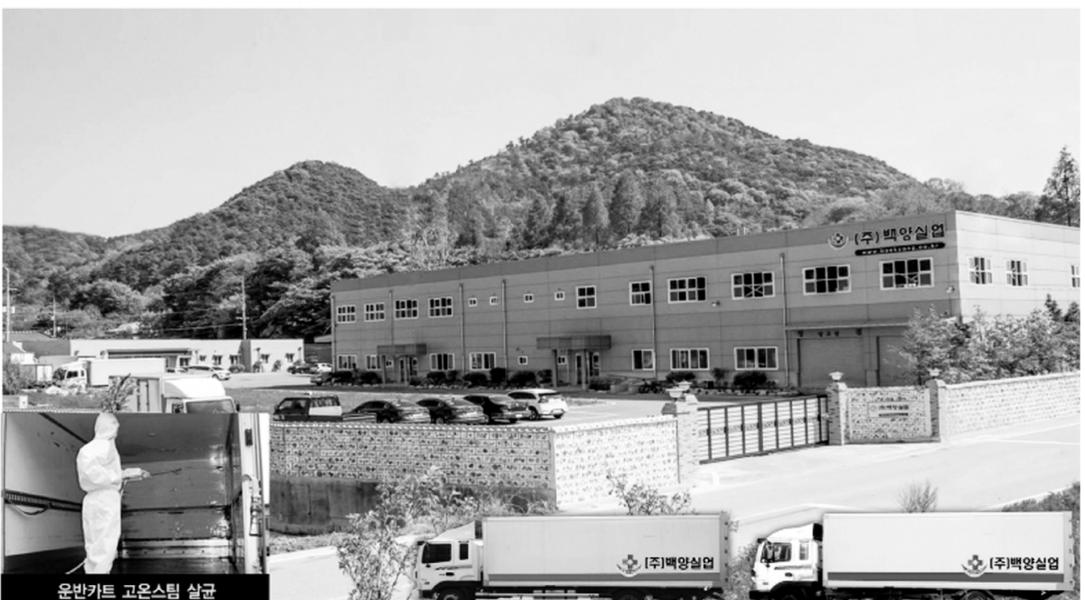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시스템 살균



(주)백양실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